

“가상통화, 실명 거래만 허용”

금융당국, “1인당 거래한도 설정 검토·불법자금 문지기 역할 은행권, 자성해야”

금융당국은 28일 은행권의 실명확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필요한 경우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는 은행권의 가상화폐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지급 효용성을 위해 만들어진 은행의 가상화폐 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으로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킨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서비스는 본인확인이나 실명확인이 미진하고 불법의심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불법자금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은행권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화폐서비스를 앞다퉈 제공한 것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화폐서비스의 신규 제공은 즉시 중단해 달라”며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화폐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도 더 이상 가상통화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은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은행권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화폐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 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달라”며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자

도 예금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서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법인 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화폐서비스가 제한된다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규제차익을 노려 일반법인 계좌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한층 더 커질 것”이라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와 달리 내재적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통화의 거래를 위한 일반법인 계좌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대 불법자금의 은닉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상의 법인계좌와는 특별히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 1월 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은행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 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다수와의 거래 거래 등 의심거래를 충실히 보고토록 하겠다”며 “가

상통화 취급업자의 실명거래 방식이 확립되기까지 은행권이 특히 일반법인계좌 개설시 취급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운영 성과와 금융정보보안, 금융감독의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앞으로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보다 힘쓰라”며 “가상통화가 기존 금융거래에 의존해 서비스되고 ‘물지마 투기자’의 거래수수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현의 이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의 조치로 실명확인, 자금세탁 등 불법 및 의심 거래에 대한 은행의 상시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과세목적의 자료 확보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

이스타항공, 국내선 셀프체크인 서비스 오픈

이스타항공이 김포공항 국내선 셀프체크인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29일부터 김포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선 공용셀프체크인(무인발권기) 시스템을 오픈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셀프체크인은 수속에 필요한 탑승권 발급, 좌석 배정 등을 무인발권기를 이용해 탑승객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체크인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선 전용 셀프체크인으로 항공기 출발 3시간 전부터

이용 가능하며, 예약번호 및 QR코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단 유료 좌석 구매 등 현장 직원 확인이 필요한 승객들은 공항 발권 카운터에서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2018년도 1월 중으로 제주공항에도 셀프체크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번 셀프체크인 서비스 오픈을 통해 카운터 혼잡도를 개선하고 승객들의 편의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고객들의 이용이 있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도내 기업들 “보수적 방향 고수”

10곳 중 7곳 내년 사업계획 방향 질문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 정치·경제적으로 격변의 한 해를 보낸 우리지역 기업들은 2018년에도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대내외리스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가 도내 기업체 154개사를 대상으로 내년도 경영환경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경제흐름에 대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54.5%로 집계되었으며, ‘악화된 것’이라는 응답과 ‘배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25.3%, 4.5%의 응답률을 보였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률은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 기업들은 현정부 출범 후 급변하는 노동시장 정책과 더불어 기준급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증가, 세계적인 긴축분위기, 환율변동, 해결되지 않은 북핵리스크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내년도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 개척이나 설비투자 확대, 인력증원과 같은 적극적인 경영활동보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의 보수적인 경영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상협 조사에 따르면 우리지역 기업들은 내년 경영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리스크로 최저시급인상(47.0%)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큰 대내외리스크로 꼽은 가운데 ‘기준급인상 가능성(26.1%)’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11.1%)’, ‘에너지믹스 변화(6.4%)’, ‘반기업정서(4.3%)’ 순으로 조사되었다.

내년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리스크로는 ‘환율변동에 따

른 경영환경 변화(28.1%)’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세계적인 긴축 분위기(21.3%)’와 ‘북핵 리스크(19.6%)’, ‘통상마찰(14.9%)’, ‘중국의 사드보복(12.8%)’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기업들의 내년도 사업계획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보수적인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응답업체가 10개사 중 7개 업체(66.7%)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내년에는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0.0%의 응답률을 보였다.(투자를 늘릴 것 29.4%)

한편, 구체적인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지만 16.1%에 불과했다.

내년도 신규채용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전년도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았으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기업도 23.8%로 집계되어 우리경제에 드러워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력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전북지역 기업들은 2018년 한국경제 키워드로 불확실성에 가려진 ‘경쟁시제(22.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현실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16.5%)’과 ‘규제개혁(13.7%)’, ‘일자리창출(13.4%)’, ‘동반성장(12.7%)’이 뒤를 이었다.

이선홍 전북상협 회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대내외적 리스크로 인해 기업들이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기업인들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와 합리적인 국제 외교정책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농어촌 지역에 지속적인 지원을”

LX-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기금 출연 협약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8일 농어촌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LX는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을 통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출연기업’의 지위를 받게 됐다.

LX는 이에 따라 연간 1억원씩 3년 동안 기금을 출연한다.

이 기금은 농어업인 자녀의 교육과 장학사업,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 사업, 공동 협력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LX는 기관 특성을 반영해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측량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베틀 나눔 측량’과 ‘1사 1촌 맺기’ 등 다양한 사업



나눔을 실천해 왔다.

박명식 사장은 “토지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공공기관으로서 농어촌 상생기금출연 기업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농어촌 지역사회의 상생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

신협서 공과금·관리비 수납 가능

복권·상품권·골드바도

앞으로 신협에서도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수납할 수 있게 된다. 복권, 상품권 및 입장권, 골드바 등의 판매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각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신협의 경우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과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입장권, 금지금(골드바), 은지금(실버바) 등의 판매대행과 지방자치단체 금고대행 등을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회에 대해서는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기업의 경영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도 신협과 함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 통합 점검과 기업대출 확대 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올해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은 전년보다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최근 기준급인상 등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지속적으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도입,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등 각종 대책이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에 대한 총담금 적립 수준을 은행·저축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상호금융업권이 가계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보다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뉴스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장미



호박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국,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농민회
전주농협 Good 농산물

전주농협농민회